

지역과 함께 여는 경기공유학교 본격 가동

겨울방학 기간 31개 시군 170여 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도 내 31개 모든 시군에서 초3~고3 학생의 방학 중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 협력 경기공유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을 넘어 학습으로, 학습을 넘어 진로까지'를 주제로, 일회성 체험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 학생들은 인성, 문화예술, 체육, 생태·환경, 인문·사회, 수리·융합과학, 인공지능(AI)·디지털, 글로컬 언어, 진로 등 다양한 학습과 진로 탐색 영역에서 흥미와 적성에 따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게임형

심리케어 ▲홍익대 연계 미술 실기 아카데미 ▲프리다이빙 스쿨 ▲지속 가능한 우리 마을 환경 공학 설계 ▲예금보현공사 협력 경제금융 공유학교 ▲유기화학 ▲빅데이터 분석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 아카데미 ▲기초 간호 임상 실무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학습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경기공유학교 온라인시스템(https://gong-u.go.go.kr) 지역별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파주시, 2026년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착수



파주시는 지난 5일 건설 분야 예산의 신속집행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건설 분야 합동설계단 운영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읍면의 기술직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4주간 운영할 방침이다.

대상 사업은 121건, 총사업비는 66억 원이다. 합동설계단은 파주시 각 읍면에서 기존에 진행된 사전 측량 결과를 토대로 도면, 수량, 내역 등을 작성하며, 안전상 우려가 있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파주시는 2026년 건설 분야 사업에 대한 설계·발주·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고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강 하저터널 홍보관 및 캠프하우스 교량 받침대(거더) 설치 현장 견학, 전산 설계(캐드) 및 측량 교육 등 실무 중심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조준동 도로교통국장은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은 파주시가 40여 년간 이어온 전통”이라며, “현장 견학과 측량, 도면 작성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2026년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송민수 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요건 부합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해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2025년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예를리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변상책임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관련자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23년 7월 25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할 당시 담당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에야 타당성 조사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과, 해당 일자까지 용역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아울러 용역 결과물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행정에 활용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 변상책임 성립 요건인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범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상책임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다만 '시의회의 변상요구 처리'와 관련해 당시 감사관에서는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예비비 사용 목적 범위 내에 있고, 예비비 지출 제한인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 제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승인하였다'는 예산담당관의 의회 회신 문서에 협조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했다고는 하나, 법원은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변상책임이 없더라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적 의무는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감사관은 향후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변상요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남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하남시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시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한 뒤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대상 법인은 현재지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으나, 이번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꼈던 법인들이 이번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보다 원활하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2월 중 조사 대상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후행동탄소 감축 효과 중심 기회소득 개편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체계 고도화하고 참여 기반은 확장

시군 참여 확대...지역 특성 살린 기후행동 연계 강화

대학생 참여 기회는 확대,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 포함

네이버 연계 전자고지서 전환 서비스 도입 등 신규 활동 도입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새해를 맞아 개편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 포함 ▲6개 시군에서 추가 리워드 신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한 참여에 익숙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후행동 실천과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로 평가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됐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활동과 이에 따른 지급액은 1월 말쯤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추가 리워드 참여 시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받는 16개 활동의 지원금이 조정됐다.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연간 1만 원에서 2만 원) ▲폐가전제품 자원순환(연간 2만 원에서 4만 원)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연간 3만 원에서 4만 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활동(연간 2만 원에서 3만 원) 등은 지원액 한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축 효과가 작은 ▲기후도민 인증(2천 원에

서 1천 원) ▲기후퀴즈(연간 1만 5천 원에서 7천300원) ▲걷기 월 4천 원에서 2천 원) 등은 지원금이 조정됐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네이버와 연계한 전자고지서 서비스를 신규 리워드 활동으로 도입한다.

종이 고지서를 전자 고지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소 감축 실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5년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7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후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변상기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도민의 행동이 기후변화를 바꾼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탄소감축 효과는 높이고, 참여 기회는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이천시, 하수관망 유량계 모니

터링 시스템 14곳 구축

이천시는 이천·단월·마장 하수처리구역 14곳에 하수관망 유량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수 역류나 도로 침수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추진했다. 시는 이번 사업완료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측과 선제적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하수관로 내부 상황은 육안 확인이 어려워 운영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는 하수 유량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 불안 해소와 생활 안전 확보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하수관망 유량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하수도 시설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청계산로 1.9km 구간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성남시 수정구는 올 하반기까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청계산로 총 1.9km 구간에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고 6일 밝혔다.

2차선 도로인 청계산로 양측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운전자 시야에서 명확히 분리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청계산로 안전시설물 설치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구간은 고등동 526-37번지부터 삼척동 94-9번지까지 0.7km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이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노란색 실선을 도색하고, 차선 분리대와 시선유도봉을 교차 설치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2단계 구간은 삼척동 94-9번지부터 120-3번지까지 1.2km로,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 구간 안전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청계산로는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로 개선된다’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군포시, 2025년 경기도 특별조

정교부금 총 133억 원 확보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민 생활 편의 증진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25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8월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9개 사업 76억 6,500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 12월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8개 사업 56억 7,000천만을 추가로 확보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환경·공공시설 개선 등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체계적인 행정절차와 전략적 대응의 결과이다.

군포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부서별 현안 및 주민 건의사항 분석 ▲현장 중심의 사업 발굴 ▲사업별 타당성 검토와 사업비 산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관련 부서 협의 및 보완 등 전 과정을 촘촘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성도 높은 사업을 신청한 점이 이번 예산확보로 이어졌다는 평가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사업 발굴부터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 수립까지 공무원들이 한 단계씩 성실하게 준비한 결과와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최우선에 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준비된 행정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민수 기자

용인특례시, 환경교육도시 현판 제막식 개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지역내 구성원과의 협업체계 구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오후 시청 하늘광장에서 환경교육도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용인특례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고, 2025년 11월 10일 환경교육도시에 재지정됐다. 이는 인천광역시와 서울 도봉구와 함께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은 것은 용인특례시 구성원 모두가 환경교육에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교육도시에 재지정된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에서 환경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래는 그냥 막연하게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미래 세대에 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난 3년간 훌륭한 활동과 높은 평가를



받은 것에서 나아가 앞으로 3년도 훌륭하고 수준 높은 환경교육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년 11월 10일 환경교육도시로 재지정받은 용인특례시는 2028년까지 모범적인 환경교육도시로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과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9월 ‘2025년 환경교육도시 신규지정 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

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 경기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99.4점1위

관내 학교와 새빛톡톡 플랫폼 연계한 제안 수업, 공무원 정책 제안 공모전 제안 문화 활성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제안활성화 우수 시군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경기도 제안활성화 평가에서 수원시는 99.4점을 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제안 접수 건수, 채택률 등 정량평가(50%)와 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노력도 등 정성평가(50%)를 종합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제안 488건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심사했다. 84건을 채택하고, 51건을 시행해 정량 지표를 개선

하고 제안 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등 내실 있게 제안제도를 운영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깨알 정책 제안 공모전’, ‘공간×내일 정책 제안 챌린지’ 등 공모전을 열어 제안을 활성화했다.

특히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이 채택된 공직자에게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하고, 공모전 수상자에게 특별 휴가를 제공하는 등 공직 내부에서 제안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모바일 시청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 채택 제안 우수 사례

카드뉴스와 정책 지도를 제작해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관내 초등학교 수업 과정과 연계한 정책 제안 프로그램 ‘우리도 참여할래요’, 대학생 대상 정책 제안 전공수업을 운영하며, 제안 문화를 확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제안활성화 평가 1위는 시민의 다양한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제안 제도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